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4. 10.(목)

산업부 장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 개최

- 관세 영향 점검 및「반도체산업 지원방안」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美)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및 반도체 품목 관세 예상에 대응하여, 4.10(목) 9:30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美 정부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 기본관세(4.5 발효)만 부과하겠다고 발표

美 정부는 지난 4.2일(수, 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우리나라는 25%*, 다만 90일간 기본관세 10%만 적용)를 발표하였으며,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도 예정하고 있어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 우리나라 25% = 기본관세 10% + 상호관세 15%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美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HBM 등)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對美 협의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업계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 · 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❶수출애로 긴급대응, ❷투자 인센티브 강화, ❸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 ·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❶ 수출애로 긴급대응 】

우선,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 · 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新)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 · 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무역관 등)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❷ 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용인 1호 팹 착공('25.2월)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 · 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 상향, 송전망 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 ❸ 생태계 강화로 공급망 위기 극복 】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 우선,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하여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트리니티 팹이 R&D ·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 · 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25~'31, 총 9,000억원(민간부담 포함))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융자사업 ('25년 1,200억원)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는 노력도 지속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 검증을 위한 공동이용 첨단장비 신규 구축,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신속 결성 및 투자 이행을 통해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해 나간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對美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는 한편,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유영석 (044-203-4273)
		담당자	사무관	하영선 (044-203-427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통상리스크 대응 반도체업계 간담회」 개요

□ **일시** : ’25.4.10(목) 09:30~10:30(60분)

□ **장소** :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장관, 산업정책실장, 통상차관보 등

○ (업계) 삼성전자·SK하이닉스(칩제조), LX세미콘·퓨리오사(팹리스), 세미파이브(디자인하우스), 동진쎄미켐·유진테크(소재·장비), 하나마이크론(후공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 **논의 내용** : 美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 **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09:30~09:35	(5분)	모두 발언	산업부 장관
09:35~09:40	(5분)	발표① : 美 관세 주요 내용 및 영향	반도체산업협회
09:40~09:45	(5분)	발표② :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	산업부
09:45~10:30	(45분)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참고2 **반도체산업 지원방안 주요 내용**

Ⅰ 추진 배경

□ **미국의 관세 부과**로 반도체산업의 **불확실성 확대**

○ 미국은 **상호관세 25%** 부과(4.2), **반도체 품목 관세도 예고**(4.3)

○ **對美 수출**은 전체 수출의 **7.5%**('24년 107억불)이나, **제3시장 경쟁 심화** 우려

□ 반도체 생산·투자 위축은 **소부장 업계 등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영세한 소부장 기업의 **투자재원 확충**, **R&D** 등에 **과감한 지원** 필요

□ **관세전쟁 격화** 등 **공급망 분절화**에 대응, **국내 생태계 강화** 지속

☞ 기업이 **당면한 수출애로를 적극 지원**하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 필요

Ⅱ 주요 정책 과제

1. 對美 협의 추진

□ **범정부 對美 협의** :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노력

□ **민-관 아웃리치 강화** 및 GAMS[민관합동회의] 등 계기 **유사입장국과 공조 모색**

2. 수출애로 긴급대응

□ **수출애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코트라 '관세대응 119', 무역관 헬프데스크, 관세대응 바우처 등 통해 컨설팅 지원

□ 수입에 의존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 대책** 검토

□ '국가 AI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도입**('30년 50% 목표) 등 **국내 수요 창출**

□ 중동·동남아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모색**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지원**

3. 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1 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메가 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 용인·평택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원 계획**(기업부담분 50% 이상) **구체화**

○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의 **추가 재정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한도 상향**

2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공제율 5%p 상향, '25.3.14 시행)

○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 등 **추가 검토**

3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관세피해 기업에 **저리대출**('25년 4.25조원) **우선 배정 및 최저금리** 적용

○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신속 조성**(산은법 개정) 추진

4 반도체 관련 추가 규제 개선

○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적용 완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30일→15일) 등

4. 생태계 강화로 공급망 위기 극복

1 소부장 생태계 집중 육성

○ **트리니티팹**(소부장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 착수('25.上, 운영법인 설립)

○ 첨단패키징 R&D 본격화 등 **소부장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 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추진('25.上 예타 신청), 기술혁신융자 확대, 공공실증센터 구축 등

2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제고

○ 1조원 규모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과제** 기획·**예타면제 신청**('25.上)

○ 팹리스 기업 **공동이용 첨단장비 확충**, 설계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3 인력양성·유치 투자 지속 확대

○ 반도체 아카데미 확대 검토,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내실화 추진

4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 하위법령 마련 및 후속조치 신속 이행